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월 309만원 버는 직장인, 국민연금 월 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아

여야가 20일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에 적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으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8년 만에 인상된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의 모수개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2026년 9.5%, 2027년 10.0%, 2028년 10.5%, 2029년 11%, 2030년 11.5%, 2031년 12%, 2032년 12.5%, 2033년 13% 등 매년 0.5%씩 8년에 걸쳐 13%로 올리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된다.

현재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출산으로 일을 쉬는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을 첫째 아이부터 12개월로,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다자녀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셈이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간 추가 산입했던 군 복무 크레딧도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 납부 재개와 상관없이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미래세대가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장'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18년 만에 연금개혁…28년 만에 오

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보험료율 2026년부터 8년간 0.5%씩 올라
소득대체율 내년부터 43%… 크레딧도 확대
기금적자 및 소진 현재보다 7년, 9년 늦춰

르는 '보험료'

여야 합의로 결실을 보게 된 연금개혁은 1988년 도입 이후 세 번째 개혁이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보험료율 3%·소득대체율 70%)로 설계됐다.

이후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췄다. 최소 가입 기간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했다. 2007년 2차 연금개혁을 통해 2008년부터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춘 뒤 매년 0.5%포인트(p) 하향 조정해 2028년에는 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2007년 이후 연금개혁이 지체돼 불안정이 가속화된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정치권과 정부는 3차 개혁에 나섰지만, 합의까지는 쉽지 않았다. 야당은 44~45%를 주장했으나 여당은 42~43%에서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번번이 합의가 불발됐다. 1%포인트(p) 차이로 논의가 한 걸음도 진전되

지 못하자 민주당이 43%를 숙고 끝에 받아들여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과 비교했을 때 보험료율은 같은 수준이며 소득대체율은 정부가 제시한 42%보다 1%p 올라갔다. 정부가 재정 안정을 위해 제시했던 자동조정장치 등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예상보다 늦춰지게 된다.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적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회 합의안이 적용되면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소진 연도는 2064년으로 늦춰진다.

◆월급 309만원 직장인, 월 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여야 합의대로 보험료율이 13%로 오르고 소득대체율이 43%가 되면 2024년 말 기준 월평균 309만원을 버는 직장인 A씨

의 경우 월 6만원을 더 내고 40년 뒤 매달 9만원을 더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를 13%를 적용하면 2024년 말 월 309만원을 버는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가 월 27만8100원에서 40만1700원으로 오른다.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직장인 가입자가 더 내는 보험료는 월 6만1800원 수준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개정안에 따른 총보험료 및 수급액 추계' 자료에 따르면 월급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총 1억8762만원을 낸다. 현행 유지(1억3349만원)보다 5413만원 많다.

이 직장인이 은퇴 후 수급 첫해 받는 첫 연금액은 132만9000원으로 개혁 이전(소득대체율 40%·123만7000원)보다 9만2000원 많다. 25년 동안 받는다고 하면 총 수급액은 3억1489만원으로 개혁 전(2억9319만원)보다 2170만원 늘어난다.

/뉴시스



“26일까지 尹 선고 일정 안 정해지면 27일 총파업” 민주노총 “신속 선고 촉구하는 취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27일 총파업을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후 매주 한 차례씩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20일 오후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재의 혼란을 끝내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결정을 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파면 선고를 미루면서 혼란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은 내란 세력의 눈치를 보고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3월 26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27일 총파업을 벌일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총파업과 관련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영업

하지 않고 있다”며 “27일 조합원들은 모두 생산을 멈추고 거리로 나와달라”고 했다.

이어 “상인들은 문을 닫고 노점은 철시하고 농민들은 출하를 중단해 함께 거리로 나가자”며 “교수들이 앞장서 휴강하고 학생들은 수업을 중단해 동맹휴학에 나가자”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양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파업 결의의 취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뿐 아니라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부 일정과 관련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27일 오후 3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식투쟁과 관련해서 “힘이 많이 빠지는 상황”이라며 “매일 저녁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의료진 소견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헌재의 일정이 확정되고 파면이 선고돼야 시민사회 대표자들의 건강이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헌재의 윤 탄핵심판 선고 늦어지는 이유… ‘소문’만 무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예상보다 더 오래 밝히지 않으면서 배경과 이유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평의 내용에 보안에 부처지고 있어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20일은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97일째, 변론을 마친 지 24일째가 되는 날이다.

앞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각각 14·11일 만에,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후 63·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미 최장 기록을 세운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11차례만에 종결할 당시만 해도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많았다. 윤 대통령은 변론 종결까지 73일이 걸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일의 변론을 마치는 데 80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헌재가 예상을 깨고 선고기일을 밝히지 않으며 전직 헌법재판관들이나 헌법학자들의 해석도 엇갈린다.

하나는 헌법재판관들이 사실관계 확정에 시간을 쏟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장원 메모’나 광종군 전 특수전사령관 등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문제삼은 대목이 거론된다.

한 헌법학자는 “(정치인 체포 지시가 배척되면) 윤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에 대해 가치 평가가 달라

철통 보안 평의 속 선고기일 통지 오전까지 없어
‘5대 3’, ‘4대 4’설… “사실관계 다투고 있다” 추측도
‘8대 0’은 이미 굳어졌다는 말도… “논리 다듬는 중”

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위법·위헌의 정도가 중대하고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고 판단해야 파면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은 ‘8대 0’이 아니라 ‘5대 3’, ‘4대 4’ 등 재판관 성향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추측도 자아낸다.

이와 반대로 ‘8대 0’은 이미 굳어졌다는 해석도 많다. 계엄군이 국회 로텐더홀까지 진입한 사실이 있고 윤 대통령 본인도 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라 지시했다고 헌재에서 발언한 사실을 뒤집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헌재의 판단이 형사 재판 결과와 다르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결정문 속 법리를 더 치밀하게 다듬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현환 전 헌법재판연구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결정문을 빈틈없이 작성하려는 의도가 하나 예상될 수 있다”며 “(혹은) 여러 사회 세력들 간의 대립 양상이 너무 첨예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양 주장들을 어떻게 결정문에 녹여 서로에게 다 수용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낼까 고민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뉴시스

제48회

보성 다향 대축제

보성에서 피어나는

천년차(茶)의 약속

제48회 보성군민의 날

5.2.(금) 보성공설운동장

군민 화합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

제3회 남도전국합창경연 페스티벌

5.2.(금) ~ 5.3.(토)

별교채동신음악당

제20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

5.3.(토) 8:00 ~ 16:00

보성공설운동장

종. 하프, 10km, 5km

제21회 일림산철쭉문화행사

5.3.(토) ~ 5.5.(월)

웅치면 용반리 일림산

제3회 보성대일리콘서트

5.3.(토) ~ 5.5.(월)

보성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

제27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5.4.(일) ~ 5.6.(화)

보성군문화예술회관

전국 만소리 교수 장연대, 주모제

제103회 어린이날 행사

5.5.(월) 한국자문화공원

악기, 제법미당, 놀이마당 등

보성 차(茶)를 활용한 공식행사, 특별행사, 기획행사, 자원회원제, 전시/경연, 공연 등

● 주최 / 주관

보성차생산자 조합 | 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회

※ 축제 일정 및 행사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전라남도 | 보성군 | 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협회